

공정위, 구글에 2000억 과징금... “경쟁OS 시장진입 방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경쟁 OS 탑재 철저히 가로 막아 AFA 체결 강제행위 시정조치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출시를 방해하는 등 시장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등 기기제조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란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한 약정이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 입장에서는 경쟁 OS다. 구글이 기기제조사들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은 셈이다. 이 약정은 특히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

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9년 97.7%가 됐고,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2~2019년까지 95~99%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AFA는 단순히 계약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

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며 “OS사업자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FA 때문에 이를 탑재해 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분야에선 아마존의 파이어 OS가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으나 AFA 위반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두려워 아마존에 협력할 수 없었다.

구글의 AFA가 기기제조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대표 사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 사례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워치용 OS를 개발하기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삼성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70여개의 앱을 탑재했으나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해 AFA 위반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했으나, 결국 타이젠 O

S를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조 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구글의 AFA 강제행위는 모바일 OS시장의 경쟁 제한과 기타 스마트 기기 OS 분야의 혁신을 저해한 결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모바일 등 비 안드로이드 OS가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범위는 관할권 등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근로복지기금 250억 투입... 18만 근로자 혜택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심사위 개최
이달 말까지 2차 지원 신청 접수

원청이 중소기업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해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를 열어 174개 공동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1월 도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

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원청이 낸 출연금에 대해 1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사내 생산부문 협력업체 116개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30억원, 116개 협력업체가 1억1000만원을 출연했고, 정부가 21억1000만원을 지원해 총 52억20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명이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았다.

최근에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

업 원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은 학자금·의료비·사택 등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8월 ICT 수출 202.7억弗... 역대 2위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2% 증가한 수준이고,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ICT 수출은 202억7000만달러, 수입은 113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8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 규모이며, 역대 월별 수출액으로 보면 2018년 9월 202억7200만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도 8억8000만달러

(23.0일)도 전년 동월(6.9억달러, 22.0일) 대비 27.4% 증가하며, 역대 8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17억9000만달러)는 모바일, 컴퓨터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와 시스템 동반 상승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22억1000만달러) 역시 모바일 등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 호조세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휴대폰(11억8000만달러)은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본격 출시로 완제품과 부품품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16억9000만달러)는 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층간소음, 실내화·매트 사용해 보세요”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활동 강화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뛰거나 걷는 소리’가 꼽혔다.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화를 신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 깔면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면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내 거주자가 1.5~4cm 놀이매트, 1~3cm 두께 실내화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이 3~6dB(A)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연휴 기간에 운영하지 않는다. /세종=원승일 기자

두승산콩마을, 행복농촌마을 대통령상

농림축산식품부 25개마을 수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한 결과 전북 정읍시 두승산콩마을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5개 분야에 107개 시군에서 1994개 마을(읍면·시설)이 신청, 최종심사 결과 25개 마을이 수상했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

마을’은 계절별 콩국수, 순두부 등 식당 메뉴 개발, 두부와 콩물, 두부과자 등 콩 가공식품 판매로 연 4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마을주민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익의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단합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무총리상(문화·복지분야)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이 수상했으며 이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금상(국무총리상)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농촌집집·유휴시설활용 분야 금상(농식품부장관상)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센터’가 수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